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조용성



우리나라는 1970~8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후유증으로 여러 환경오염문제를 겪었고, 많은 노력을 통해 전통적인 환경문제들을 해결해 오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새로운 대기오염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2015년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강수량이 적어지고 대기의 흐름이 약해지는 봄과 가을철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일례로 지난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16년과 2017년에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연속으로 발표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올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22년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5.8%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에너지포커스 ‘이슈와 시선’의 칼럼들에서 지적하듯이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은 어느 한 가지만을 단정지을 수 없고, 다양한 요인이 여러 경로를 통해 생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외 유입 요인에 대한 국제적 협력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국내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 수송(도로 및 비도로), 산업, 농업 부문 등 다양한 발생원에 대한 저감 노력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의 축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에너지 효율 혁신, 친환경차량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수소경제로 대표되는 신에너지 산업의 육성도 에너지 분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은 곧 확정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세먼지 정책 추진 관련 염두에 뒤야 할 점이 있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다른 분야 정책들과의 상호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수송부문에서의 경유차 비중 축소는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편 문제와 동시에 검토되어야 하며,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발전부문의 전원믹스(MIX) 등과 긴밀하게 연결된 사안이다. 국제적인 노력 역시 해당 국가 다른 분야에서의 외교·협력관계와 밀접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부담과 고통부담이 따른다.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고농도 현상 발생 시 대중교통 이용 및

자동차 이용 자제에 따른 불편함 등과 같은 추가적인 비용을 국민들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외에도 그러한 비용부담과 고통분담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통분담과 비용부담 없이는 미세먼지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